

월요광장

오월의 노래, 기억과 해석 사이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해나와 나의 목적은 도청 앞에서 열리기로 한 광주시향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의 연주를 듣는 것이었다. 그해는 80년 5월 광주에서 30년이 지난 해였다. 기념할 만한 해였기 때문에 그런 연주가 야외에서 열리는 것이었다. (...) 우리가 보기로 한 연주는 비가 와서 취소가 되었다. 해나는 말했고 나는 아쉽게도 했지만 그림 이제 몇 년 전 한 번 본게 다인 해나와 무얼 해야 할지 약간 당황스러웠다.”

위의 인용문은 박솔피의 단편 소설 ‘그림 무얼 부르지’ 속에서 ‘나’가 미국에서 알게 된 ‘해나’와 3년 만에 광주에서 다시 만난 상황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인용문 속 에피소드로 쓰인,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의 ‘광주시향 5·18 30주년 기념 음악회’는 소설에서 묘사된 대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야외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우천 사정으로 취소되었다. 다음 날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실내 연주가 이루어졌지만, 애초 기획의 도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셈이었다. 그것은 시민합창단을 포함한 518명이라는 상징적 숫자의 시민 연주단이 도청 앞 광장에서 한목소리로 연주하고 노래함으로써 ‘오월 코린’을 음악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이었다.

이 음악회를 기획하고 총연출했던 이는 2010년 당시 광주시향의 음악감독이었던 구자범 지휘자였다. 그로부터 10년 만에 이제는 프리랜서 음악가인 그가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 주관한 ‘오월 평화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울광장 야외 연주 기획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월의 서사로 번역된 말러 교향곡 2번 외에도 지휘자 자신의 편곡으로 민중가요 ‘그날이 오면’ 합창을 삽입시킨 말러 교향곡 3번 마지막 악장을 서곡처럼 연주함으로써 ‘서울의 봄, 광주의 빛’이라는 페스티벌의 주제를 부각시킬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해 초부터 온라인 동영상 오디오션을 통

해 전국에서 시민 오케스트라와 시민 합창단을 선발했지만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연 취소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518명이 연주할 계획이었던 이 음악회는 결국 네 명의 성악가와 네 명의 기악 연주자(직접 편곡과 피아노 반주를 맡은 지휘자 포함)만이 참여한 30분가량의 짧은 실내악 공연으로 축약되었고, 지난 5월 16일 밤 ‘오월에 부치는 음악 편지’라는 소박한 제목으로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말러 교향곡 2번은 한국어로 노래하는 실내악 반주의 짧은 독창 연가곡으로 변모했다. 실제로 말러가 교향곡을 쓰는 데 활용했던 가곡들을 되살린 것이다. 이들 가곡은 구 지휘자의 한글 가사 번역과 편곡을 통해 섬세하게 오월의 이야기로 옮겨졌고 무대 위의 성악가들도 오페라적 연기와 함께 오월의 역사를 재현했다. 예컨대 원곡에서 교수대에 올라 무고한 죽음을 맞는 ‘부치는 소년’은 오월 최후의 현장에서 죽음을 맞은 무고한 ‘시민’이 되어 ‘전남도청’과 ‘무등산’에 안부를 고한다.

죽음과 꿈, 고통과 환멸에서 소망과 부활에 이르는 이 오월의 음악적 이야기에 서 음악감독이 합창은 물론 중창까지도

쓰지 않은 것은, 예기치 않게 축약 재구성된 이 공연의 ‘미완’의 성격과 그에 따른 아쉬움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 보헤미아의 가난한 유대인으로 태어나 제국주의적 야욕에 물든 세기말의 유럽을 살아가던 작곡가 말러가 그려 낸 음악적 서사가 오월의 기억과 연결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고통과 비극의 음악적 표현은 인류 공통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서두에 인용한 박솔피의 소설에는 ‘그림 무얼 부르지’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음악적인 질문이 비등 있게 담겨 있다. 그것은 옛 ‘민중가요’를 듣기조차 불편해 하는 이른바 ‘포스트 오월 세대’에게 어떤 음악이 오월에 대한 기억과 공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 줄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기억과 공감은 무수한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무얼 부르지?’ 하고 고민하기에는 우리가, 광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너무나 많은 고통과 희망의 노래와 음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공생하나마 답으로 남기고 싶다. 또 한 번 미완으로 남은 광장의 합창이 언젠가 다시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기고

불혹(不惑)의 5·18, 여전히 아프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팝나무 새하얀 꽃봉오리가 탐스러운 싉둑의 계절 5월이다. 저 먼 바다 끝 제주 도박이들이 4월이면 몸살을 앓듯, 매년 오월이 오면 광주 사람들은 가슴앓이로 밤잠을 설친다. 겨우내 읊조렸던 꽃망울이 움트고, 너른 들에 싹이 돋듯 40년의 세월 속에 응어리졌던 광주 시민의 아픈 마음도 서서히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 등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계속되는 왜곡과 폄훼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다시금 들추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맞이한 지금 전 세계는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

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기념행사가 축소되거나 대국민대회, 민주기사의 날, 일일 캠프촌 등 대체롭게 준비했던 행사들이 취소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자유연대 등 극우 보수단체는 5·18 유공자 명단공개 등을 요구하며 5·18 민주 정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규모 집회를 전개하고 있어 착잡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다. 더 나아가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채택되며 세계에서도 인정 받은 민주 유산이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5·18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산화하신 민주 영령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며,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불멸치한 행동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하여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날을 기리기 위해 지난 4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5·18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일년 중 그 하루만큼은 5·18 정신에 대해 광주시민 모두가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또한 4월 24일 전국시도시장협의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날조하는 세력을 단죄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여 공식 안전으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지역을 넘어서 전국 시도 광역의회가 공조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지난 5월 6일에는 사·차지구 의원 80여 명이 모여 극우 보수단체의 급남로 집회를 규탄하고, 5·18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광주시민의 분노와 5·18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강하게 표명했다.

현 정부 들어 그날의 진실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러지고, 5·18 당시 헬기 사격 등 발포 명령자로 지목받고 있는 전두환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으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리 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시작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오월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자(孔子)는 나이 40을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다 하여 불혹이라 하였다. 40주년 5·18을 맞이하여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외부의 어떤 망언에도 흔들림 없이 서로를 믿으며, 우리가 간직해 온 이 5·18 정신을 후세에 잘 전달하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뒤 5·18이 지천명의 나이가 되면 지금의 이 시련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축진제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그때쯤이면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남아 있던 마음의 흉터도 완전히 아물게 되기를 소망한다.

기고

사무장 병원 단속 ‘특사경법’ 20대 국회서 처리돼야



조옥현 전남도의회 의원

2018년 1월에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대규모 화재로 47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피해의 표면상 원인으로 불발 증폭에 따른 대피로 미확보가 지적되었으나 이번에는 이 병원이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서 건물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시설이었다는 사실이 감춰져 있었다.

‘사무장 병원’이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과잉 진료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 3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적발된 기관은 1611개에 환자 결정 금액은 3조 2287억 원에 달한다. 반면 징수액은 1788억 원으로 결정 금액 대비 5.5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누수액이 1조 원이나 증가해 건보 재정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환자 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누적 환수율은 2018년에 6.72%, 2019년 5.54%에 그쳤다. 매년 환자 결정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환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수사와 행정 조사의 주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는 일선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사건 등에 밀려 제때 대처가 어렵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행정 조사는 자금 흐름 추적 등 수사권이 없어 협의의 입장에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단속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국회에서 ‘사법 경찰 직무법’(특사경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특사경 권한을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여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오남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은 의·약계에서도 치료의사회·약사회·간호협

회는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1.3%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던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행정 조사와 연동함으로써 3개월 이내로 단속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이 절감되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 개설 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그 가운데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말해다오 무등산아, 그날의 진실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부쳐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돌을 맞는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 광주 시민들은 군부 독재 정권의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서였다. 처절한 고립 속에 펼쳐진 열혈간의 항쟁은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분화였다. 그 모든 과정을 무등산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5·18 정신은 80년대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나아가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40주년을 가슴 벅차게 맞이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풀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발표 명령자 등 오월의 핵심 진실은 여전히 어둠에 묻혀 있고, 학살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언죽번죽 망발을 일삼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이 실시한 수차례의 조사가 여러 가지 한계로 부실하게 이뤄진 탓이다. 그 한계 중 결정적인 것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5·18 직후부터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군 기록을 집요하게 왜곡·조작·폐기해 버린 것이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돌을 맞는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 광주 시민들은 군부 독재 정권의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서였다. 처절한 고립 속에 펼쳐진 열혈간의 항쟁은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분화였다. 그 모든 과정을 무등산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5·18 정신은 80년대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나아가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40주년을 가슴 벅차게 맞이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풀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발표 명령자 등 오월의 핵심 진실은 여전히 어둠에 묻혀 있고, 학살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언죽번죽 망발을 일삼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이 실시한 수차례의 조사가 여러 가지 한계로 부실하게 이뤄진 탓이다. 그 한계 중 결정적인 것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5·18 직후부터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군 기록을 집요하게 왜곡·조작·폐기해 버린 것이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은 이렇게 해서 생긴 빈틈을 이용해 갖가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며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고 있다. ‘5·18은 폭동’이라는 전두환 회고록이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보수 단체들과 유튜브버들이 광주 한복판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막발과 모독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최근 조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진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사위는 발표 명령자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및 암매장, 인권 침해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되는데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치밀한 기법과 전략이 요구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3년이다. 특별법은 진상 조사가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

일부 극우 세력들은 이렇게 해서 생긴 빈틈을 이용해 갖가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며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고 있다. ‘5·18은 폭동’이라는 전두환 회고록이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보수 단체들과 유튜브버들이 광주 한복판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막발과 모독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최근 조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진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사위는 발표 명령자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및 암매장, 인권 침해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되는데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치밀한 기법과 전략이 요구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3년이다. 특별법은 진상 조사가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

無等鼓

말과 글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진 과거 사례’를 끌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듣거나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내로라하는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면서 논어·맹자·삼국지 등 동양의 유명한 고전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날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의 사고방식과 방향을 결정하고 또 타인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고사나 서적들이 동양 특히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점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다. 과거엔 민초들의 문맹률이 높았던 만큼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는 고사나 서적들은 중국 중심의 ‘군주제와 사대주의’에 익숙한 당시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호·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가 민중의 치열한 저항 속에서도 어떻게든 유지되고, 결국엔 촛불 혁명으로 무

너저 내리 박근혜 정부가 애초 출범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도 일부 국민의 무의식에 스며든 ‘군주제와 사대주의’의 영향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타국의 정신과 문화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떠오르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아직까지 묶어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주 한국민속학회가 ‘세세세’나 ‘고무줄놀이’ 등 우리의 전통 놀이 일부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족 고유의 정신과 문화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 무의식 깊숙이 숨어 있는 일본 정신이 민중혼을 감아먹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살고나 해서 과거를 제자리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다. 민족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각과 기준에 자신도 모르게 안주하고 있지 않음을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